

#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방향\* \*\*

- 인권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

양 천 수\*\*\*

## I. 서 론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요 근래에 인권을 다룬 책들이 다수 출판되고 있다.<sup>1)</sup> 인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증가하여, 이제 인권은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1년에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이 예전보다 못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 동안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북돋는 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시한 여러 단체와 학문체계의 노력으로 이제 인권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인권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인권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동시에 인권과 관련된 부작용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인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권을 특정 이념 혹은 특정 진영과 결부지어 생각함으로써, 인권이 전체 인간을 위한 권리가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한 권리인 것으로 각인되고,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 투고일자 : 2011. 11. 18      심사일자 : 2011. 12. 9      게재확정일자 : 2011. 12. 23

\*\* 이 글은 지난 2011년 8월 23일 통일교육위원 대구지역협의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 발표 당시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 최소한도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법학박사

1) 이를 지적하는 장정일, 『빌린 책/산 책/버린 책』, 마티, 2011, 37쪽.

다.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앞으로 인권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지를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중에서도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개진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정책이야말로 인권정책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부분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II. 인권교육의 필요성

논의의 이끌어가기 위한 전제로서 우선 인권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 1.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 팽배한 것은, 인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권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인권에 대해 근거가 없는 거부감이 만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의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들춰보면 알 수 있듯이,<sup>2)</sup> 인권은 자연권의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하였다. 시민혁명이 서구사회를 휩쓸던 당시 인권은 곧 시민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 때 말하는 ‘시민’은 지금처럼 이른바 ‘못 가진 자’(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부르주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권의 주체인 시민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였다. 그 때문에 근대 시민혁명 당시 처음 등장한 인권 개념은 생명, 신체, 자유와 함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중요한 인권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마르크스(K. Marx)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인권을 부르주아들의 권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다.<sup>3)</sup> 인권이 못 가진 자들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사

2) 이에 대해서는 우선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9, 49쪽 아래 참고.

3)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9, 82쪽 아래.

회권이 인권에 편입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인권은 애초에 시민을 위한 권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오늘날에 인권은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로 승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권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을 어느 특정한 집단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시민사회의 인권운동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권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를 위한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대 서구에서 등장한 근대적 인권이 그 당시 서구사회를 지배하던 봉건적 사회구조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 개념이 사회변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인권 개념을 활용하는 전략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권 개념을 사회적 소수자와 연결하여 파악하기 시작하면, 인권 개념은 인권 개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인 보편성을 상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권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권리로 규정하면, 인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권리일 수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인권은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인 권리가 아닌, 특정한 이들을 위한 특수한 권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을 자신의 권리로 삼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인권을 자신들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로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 인권 및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모든 노력들은 이론적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인권을 우리 사회의 특정한 집단을 위한 권리로만, 가령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권리로만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정한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고, 또 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들만을 위해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필자는 공익과 인권을 대비시키면서, 공익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인권은 어느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승인되고 있는 인권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 개념은 ‘중립적인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인권교육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2.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기본 토대로서 인권교육

나아가 인권교육은 합리적인 인권정책을 펼치는 데 기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합리적인 인권정책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sup> 그러나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 필자의 구상만을 제시하면, 필자는 합리적인 인권정책은 절차주의적 인권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5)</sup> 절차주의적 인권정책이란 모든 관련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관련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절차주의적 인권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모든 관련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즉 모든 관련자들이 인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권정책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권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모든 관련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 물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절차주의적 인권정책은 절차주의적 인권구상과도 관련을 맺는다.<sup>6)</sup> 그런데 이렇게 절차주의적 인권정책, 더욱 쉽게 말해 ‘대화적 인권정책’(diskursive Menschenrechtspolitik)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서 모든 관련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이에 관해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대화적 인권정책은 모든 관련자들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성찰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최소한 인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고, 인권을 향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대화적 인권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성찰이 형성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대화적 인권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서 인권교육은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 3. 인권으로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인권교육은 합리적이고 대화적인 인권정책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4) 합리적인 법정책에 관한 필자의 구상에 관해서는 양천수,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과 기준 - 전략물자에 대한 법적 통제를 예로 하여 -”, 『영남법학』 제24호(2007. 4), 69-94쪽 참고.

5) 이러한 절차주의적 인권정책에 관해서는 우선 양천수, “자율적 토론과 참여에 바탕을 둔 청소년 인권정책 가능성”, 『인권이론과 실천』 제5호(2009. 6), 17-36쪽 참고.

6)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철학적 논증 가능성”, 『인권이론과 실천』 제1호(2007. 4), 23-35쪽 참고.

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단순히 국가가 수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 자체가 우리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측면이고, 인권정책은 우리 삶의 생존 조건인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 역시 단순한 수혜 이상의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인권교육이야말로 합리적인 인권정책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권실현을 위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권인 셈이다.

### III. 합리적인 인권교육정책의 방향

#### 1. 새로운 인권교육정책 설계의 필요성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인권교육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의 인권교육정책이 일종의 전환기에 서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인권교육정책이 전환기에 서있다는 점은, 최근 UN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sup>7)</sup> 또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채택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앞으로 10년간 적용할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을 모색하고 있다.<sup>8)</sup>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인권교육정책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인권교육정책 현황 분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권교육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그 동안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인권교육정책은 어떤 의미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이는 지금까지 축적된 인권교육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야만 비로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를 아직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

7) 이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2010 참고.

8) 현재 필자가 책임지고 있는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 이루어진 인권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현재 필자가 대략적으로나마 지니고 있는 시각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우선 성과부터 지적하면,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인권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인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인권교육정책을 통해 인권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자각시킨 것은 크나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인권교육 자체가 각 영역에서 양적으로 팽창되는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그 동안 실시된 인권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닌다고 생각한다. 즉 그 동안 인권을 대중화하는 것에 집중하여, 인권교육을 전문화·제도화하는데 다소 소홀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내적 분화에 발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사회 각 영역의 전문화 및 세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그 동안 경찰이나 군대 등과 같은 공무원 영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과 같은 학교영역, 장애인이나 여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초점을 맞춘 시민사회영역 등에서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장되었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각 영역에 상응하게 인권교육을 전문화·체계화하는 데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요컨대, 인권교육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다시 말해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것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검찰, 법원 등과 같은 법집행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권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영역이나 정보인권 및 기업인권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인권교육이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인권교육정책 모델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한다.

### 3. 합리적인 인권교육정책의 방향

그러면 앞으로 실행해야 할 합리적인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인 발전계획이 흔히 그렇듯이, 여기서 필자는 비전, 실행원칙,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권교육정책에 관해 간략하게 개관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제시하는 방향은 잠정적이면서 아주 개략적인 것으로, 이는 앞으로 필자가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변경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1) 비 전

먼저 인권교육정책의 비전(vision)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권교육정책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면서도, 모든 이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전은 정책추진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어떻게 비전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인권교육에 대한 공부와 아직 부족한 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권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현재 필자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을 제시하면, 필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권교육정책의 비전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권교육에 대한 고정된 방향이나 틀에서 벗어나,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의 구조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권교육정책은 점점 분화되어 독자성을 획득하고 있는 사회 각 영역에 의해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실행원칙

필자는 이러한 비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원칙으로서 ‘대화적 인권교육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sup>9)</sup> 대화적 인권교육정책이란 하향식으로, 즉 ‘Top-Down’ 방식으로 인권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관련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Bottom-Up’ 방식이 바로 대화적 인권교육정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적 방식으로 인권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만 비로소 사회의 구조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핵심목표

인권교육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비전과 실행원

9) 이는 달리 절차주의적 인권교육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칙 위에서 더욱 구체화된 핵심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핵심목표로서 크게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의 권리화, 인권교육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체계화,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 (1) 인권교육의 권리화

우선 인권교육의 권리화는 인권교육을 인권으로서, 더 나아가 실정법상 권리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그 동안 인권교육에서 제외된 부분을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인권교육의 권리화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로서 인권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작업이나 새로운 인권교육대상을 발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인권도시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나 인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 역시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위한 전략과제로 언급할 수 있다.

### (2) 인권교육의 전문화

나아가 인권교육의 전문화란 인권교육이 사회의 각 전문영역에 맞춰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권교육전문가,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과 같은 전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교육 전문화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각 전문영역별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전문적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3) 인권교육의 체계화

나아가 인권교육의 체계화란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각종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의 의미를 이른바 ‘비용-편익 분석’에서 강조하는 효율성의 의미로만 새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인권교육의 체계화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인권교육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효율성의 의미로 새길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로는 인권교육의 프로그램과 매뉴얼 마련, 새로운 인권교육 교수법 개발, 새로운 인권법 교재개발, 인권교육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을 떠올릴 수 있다.

#### (4) 인권교육의 제도화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제도화란 인권교육이 안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인권교육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체계화가 추구하는 목표와 유사하다. 다만 인권교육의 체계화가 - 비유적으로 말하면 -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안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면,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제로서는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 펀딩체계 구축,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에 관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인권교육원이 인권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평가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인권교육원이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인권교육센터로 조직화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연구교육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또는 법무부가 산하에 형사정책연구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도 산하에 독자적인 인권교육연구기관으로서 인권교육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필자는 인권교육원을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을 연결하는 공간, 다시 말해 ‘네트워크 복합체’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인권교육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역할을 바로 인권교육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인권교육전문가를 인권강사로 위촉한다면, 인권교육원에서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할 수도 있지만, 한국연구재단처럼 독립된 공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인권교육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5) 북한인권교육에 관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오늘 학술세미나의 주제인 “북한인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필

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개진하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자는 북한인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4대 핵심목표 중에서 인권교육의 전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인권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북한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즉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 남한의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재단하기보다는, 상호협력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해 ‘상호합법성’의 원칙 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sup>10)</sup> 그래야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 혹은 북한주민 역시 수긍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V.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해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인권교육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이 발표는 말 그대로 일종의 스케치에 머물고 말았다. 이 점 관련 전문가 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더욱 정진하여 오늘 스케치에 머물고 만 인권교육정책 구상을 좀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보잘 것 없는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sup>11)</sup>

10)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 북한 인권에 대한 범정책의 방향 -”,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2007. 5), 211-234쪽 참고.

11)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은 필자가 이 글을 처음 발표할 당시의 연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발표한 이후, 필자는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면서 이 글에서 제시한 구상 중에서 몇 가지를 바꾸었다. 그 중에서 특히 비전과 핵심목표를 수정하였다. 인권교육정책의 비전으로서 필자는 “인권교육을 통한 공생사회 실현”을 제안하였고, 핵심목표 중에서는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인권교육의 전문화’에 통합시키고, 그 대신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새로운 핵심목표로 제안하였다.

##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2010.
- 양천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철학적 논증 가능성”, 『인권이론과 실천』 제1호 (2007. 4).
- 양천수,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과 기준 - 전략물자에 대한 법적 통제를 예로 하여 - ”, 『영남법학』 제24호(2007. 4).
-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 북한 인권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 - ”,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2007. 5).
- 양천수, “자율적 토론과 참여에 바탕을 둔 청소년 인권정책 가능성”, 『인권이론과 실천』 제5호(2009. 6).
- 장정일, 『빌린 책/산 책/버린 책』, 마티, 2011.
-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9.

<국문초록>

##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방

- 인권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

양 천 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그 중에서도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개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권교육정책이야말로 인권정책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부분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왜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II). 여기서 필자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합리적인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루었다(III). 필자는 합리적인 인권교육정책의 방향을 크게 비전, 실행원칙,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목표인데, 필자는 인권교육의 핵심목표로서 인권교육의 권리화, 인권교육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체계화,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인권, 인권정책, 인권교육, 합리적인 인권정책, 북한인권

<Zusammenfassung>

## Perspetiven einer rationalen Menschenrechtspolitik

– Mit Schwerpunkt einer Menschenrechtserziehungspolitik –

Yang, Chun-Soo

Professor,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nach Perspektiven einer rationalen Menschenrechtspolitik zu suchen. Vor allem konzentriert sich der Autor darauf, Richtungen einer rationalen Menschenrechtserziehungspolitik zu ziehen. Der Grund dafür liegt darin, dass eine Menschenrechtserziehungspolitik für den Autor sowohl eine Grundlage als auch ein wichtiger Teil der Menschenrechtspolitik ist. Die vorliegende Arbeit gliedert sich wie folgt: Zunächst geht die Arbeit auf die Frage ein, warum wir Menschenrechtserziehungen brauchen (II). Dabei liefert der Autor drei Gründe. Danach konzentriert sich der Autor darauf, was Perspektiven einer rationalen Menschenrechtserziehungspolitik sind (III). Dabei stehen Vision, Prinzipien und Kernziele der Menschenrechtserziehungspolitik im Vordergrund.

Key words : Menschenrechte, Menschenrechtspolitik, Menschenrechtserziehung, rationale Menschenrechtserziehung, Menschenrechte von Nordkorea